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규제)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2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중단 및 높은 관세율 적용, 미소기준 면세 혜택 폐지 등 포함

📊 경제통상 동향

- (경제)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단행, '24년 GDP는 2.8% 기록 4
- (수입규제) 트럼프 행정부, 제로잉 방식 재도입 검토...수입규제 관세율 인상 가능성 5
- (인선) 美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인준 시 강경한 관세 정책 추진 시사 6
- (규제) 손 더피 신임 교통부 장관, 연료 효율 규제 개정 명령 6
- (입법) 美 하원, 대통령의 관세 권한 강화를 위한 '상호무역법' 발의 7

🏛️ 의회법안 동향

- 반도체, 미소기준, 인터넷 상품 원산지, 인공지능 등 상·하원 발의 4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2.3(월)	• 1월 S&P 최종 미국 제조업 PMI (S&P final U.S. manufacturing PMI)
2.4(화)	• 12월 채용 정보 (Job openings)
2.5(수)	• 12월 무역적자 (U.S. trade deficit)
2.6(목)	• 4분기 미국 생산성 (U.S. productivity)

(입법)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1. 개요

□ 미 의회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를 논의 중이며, 정부도 관련 검토 진행

- '00년에 중국은 PNTR 지위를 획득하여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 관세 혜택을 적용받았으나, 이후에도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유지
- 불공정 경쟁 및 국가 보조금을 통한 시장 왜곡,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IP) 침해, 미국 제조업 쇠퇴 및 일자리 유출 등의 문제로 PNTR 철회 필요성 제기
- '23년 미 하원 중국특위(Select Committee on the CCP)는 PNTR 철회 권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PNTR 지위 관련 입법안을 검토 중

□ 미 하원은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1.23)

-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R-MI)과 톰 코튼(R-AR), 짐 뱅크스(R-IN)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및 Column 2의 높은 관세율 적용 포함
- 본 법안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설정, 공급망 리스크 축소,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

2. 법안의 주요 내용

□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및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 중국산 수입품 대상 HS코드 Column 1 대신 Column 2의 높은 관세율 적용
 - 중국산 비전략 품목에 최소 35% 관세, 전략 품목에 최소 100% 관세 추가 부과*
- * 전략 품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기술 목록(Advanced Technology Product List)과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을 참고하여 지정
-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 예정 △법안 발효 후 180~364일: 10%, △2년차: 25%, △4년차: 50%, △5년차: 100% 적용
 - 해당 세율은 물가상승률(CPI)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예정
- 기존 관세의 책정 기준이 기존 HS코드에서 “미국 내 거래 시점의 시장 가격(United States Value)” 기준으로 변경
- 수입업체는 제품의 미국 내 시장 가격을 명시한 성명서를 세관(CBP)에 제출 필요

□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혜택 종료

- 중국 및 특정 국가(Covered Nations)*에서 수입되는 소액 배송품(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 혜택 폐지
 - * 미 국방부가 국가안보 위협 및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하여 지정한 ‘특정 국가(Covered Nations)’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포함
- 저가 신고, 우회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무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액 배송품에 세관 브로커 이용 의무화

□ 대통령 무역 제재 권한 강화

-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 관행, 인권 침해와 관련된 중국산 제품 수입 금지 권한과 특정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 조정 및 쿼터 설정 권한 부여

▪ 작성자	워싱턴DC 무역관 정수나
▪ 자료원	International Trade Today(1.24), CCP(1.25)

(경제)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단행, '24년 GDP는 2.8% 기록

- 연준, 1월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4.25~4.50% 동결 발표
 - 이번 금리 동결은 작년 세 차례 금리 인하(총 1%p) 이후 단행된 조치로, ①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②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③ 견조한 노동 시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현지 언론은 향후 3개월의 근원 PCE 데이터가 연준 정책 결정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
- 미국 '24년 GDP 성장률, 연율 2.8% 성장세 기록(BEA, 1.30)
 - 미 경제분석국(BEA)은 '24년 4분기 GDP 성장률을 연율 2.3%로 집계, 이는 전기(3.1%) 대비 둔화된 수치로 시장 예상치 2.6%를 하회했다고 발표(연간 GDP 성장률 2.8% 기록)
 - 4분기 미국 실질 GDP는 소비자·정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둔화와 순수출 감소로 연율 2.3% 기록, 물가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price index) 2.3%,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식품 및 에너지 제외) 2.5%를 기록하며 '23년 대비 둔화세 관측

실질 GDP 및 관련 지표(전 분기 대비 백분율 변화)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	2.3
GDP (Current US\$)	4.5
국내총구매 물가지수(Gross domestic purchases price index)	2.2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price index)	2.3
식품·에너지 제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5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블룸버그(1.29), 뉴욕타임스(1.30)

(수입규제) 트럼프 행정부, 제로잉 방식 재도입 검토...수입규제 관세율 인상 가능성

- (개요) 트럼프 행정부의 제로잉 방식 복원으로 수입규제의 관세율 인상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포괄적인 무역 정책 검토를 지시했으며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적용에 관한 정책과 규정 검토 요구
- International Trade Today는 1.20일 발표된 백악관 각서 내용에 대해 다수 무역 로펌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마진을 증가 전망

- (상세) 백악관 무역정책 각서, 제로잉을 포함한 수입규제 정책 포괄적 검토 지시

- 백악관 각서 내 수입규제 관련조항은 상무부에 다국적 보조금, 비용조정, 제휴 및 제로잉 방법론을 포함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적용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절차 수정도 고려할 것 지시
- 제로잉 방법론은 덤핑 마진 산정 방식으로, 수출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0으로 간주하여 덤핑 마진을 과대 계산하는 효과가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덤핑 관세율 인상을 의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검증 강화, 절차 요건 강화, 보조금 조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백악관 무역정책각서(America First Trade Policy) 내 수입규제 검토 관련 조항〉

(h)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review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D/CVD) laws, including with regard to transnational subsidies, cost adjustments, affiliations, and “zeroing.”

- [다국적 보조금, 비용 조정, 제휴 및 제로잉을 포함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적용에 관한 정책 및 규정 검토 지시](#)

Further,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review procedures for conducting verifications pursuant to section 1677m of title 19, United States Code, and assess whether these procedures sufficiently induce compliance by foreign respondents and governments involved in AD/CVD proceedings. The Secretary of Commerce shall consider modifications to these procedures, as appropriate.

- [미국법 제19장 1677m 조항에 따라 검증 수행 절차를 검토하고 평가, 필요시 절차상 수정 고려 지시](#)

[자료: 백악관 각서(1.20)]

-
- | | |
|-------|--|
|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김준희 |
| ▪ 자료원 | International Trade Today (1.28), 백악관 각서(1.20) |

(인선) 美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인준 시 강경한 관세 정책 추진 시사

- (개요) 러트닉, 해외 시장 개방을 위해 모든 수입품 대상 전면적 관세 부과 주장
 -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지명자, 특정 국가로부터의 모든 수입품 대상 광범위한 전면적 관세 부과 주장(상원 인준 청문회, 1.29)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중국 고율 관세,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모든 수입품 10%~20% 보편 관세 등)에 동조, 미국 신정부의 강경한 관세 및 무역 의제 추진 시사
- (상세) 무역 '상호주의' 강조, 관세를 불공정 무역 대응, 협상규제 도구로 활용 제안
 - 러트닉은 무역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관세를 ① 불공정 무역 대응 및 협상 도구로 활용, ②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 관련 중국 규제 강화 및 수출통제에 활용 제안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HIPS법 관련,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보장 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일본산 철강, 한국산 가전제품을 무역협정으로부터 불공평한 혜택을 받은 사례로 지적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의 미국 내 복귀 필요성 강조
 - 트럼프 행정부 1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관세에 부여된 면제 조항 축소 지지, 전면적 관세가 특히 자동차 제조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폴리티코(1.29), 인사이드(1.29), 로이터통신(1.29)

(규제) 손 더피 신임 교통부 장관, 연료 효율 규제 개정 명령

- 교통부 장관 손 더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엄격한 연료 효율 규정 개정을 위한 지침 제시(1.29)
 - 더피 장관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HTSA)에 '22년식 이후 생산된 차량에 대한 기존 연료 효율 기준을 검토하도록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연비 규제 완화 및 IRA를 포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 정책 철회를 고려하라고 행정부에 명령

•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 완화 기대로 전기차 출시 계획 재검토**

- 스텔란티스는 첫 전기 램 픽업트럭 생산 계획을 연기하고, 오하이오주 지프 SUV 공장 해고 계획 철회 및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새로운 중형 트럭 생산 재개
- 또한, 크라이슬러는 전기 크로스오버 개발을 중단했고, 알파로메오 브랜드는 '27년까지 전기차만 판매하려던 계획 취하
- 폭스바겐은 화요일에 ID.7 전기 세단 미국 시장 출시 계획 철회 발표(1.28)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블룸버그NEF는 '30년까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대한 전망을 48% → 33%로 하향 조정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 블룸버그(1.29)

(입법) 美 하원, 대통령의 관세 권한 강화를 위한 '상호무역법' 발의

• (개요) '미국 상호무역법'(U.S. Reciprocal Trade Act) 하원 발의

- 하원 세입위 라일리 무어(Riley M. Moore) 의원이 공화당 의원 8명과 공동 발의
- 외국의 불평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발생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역 협상과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 (상세) 관세·비관세 장벽의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 인정

- 외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불평등한 관세와 부당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 무역 실현을 통해 미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 대통령이 (1) 미국-외국의 관세율 비교 (2) 외국의 부당한 비관세 장벽 관행 조사 (3) 외국과 협상 진행 (4) 관세 명령 등 권한 행사

▪ 작성자 | 워싱턴DC 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인사이드(1.28), 미국 의회(1.24)

미국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반도체 (1.28)	H.R.802 (하) (1.28)	Blake Moore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6년 내부수입법을 개정, 첨단 제조 투자 신용(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에 반도체 설계 지출 추가
미소기준 (1.28)	H.R.805 (하) (1.28)	Gregory Murphy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30년 관세법 제321조(de minimis)를 개정 해당 법에 따른 면제 수정 관세 부과 제품에 대한 미소기준 면제 종료로 미소기준 항목의 투명성과 데이터 수집 개선, 관련 미국 법률 위반 시 처벌
인터넷 상품 원산지 (1.29)	S.294 (상) (1.29)	Tammy Baldwin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판매를 위해 출시되는 외국산 신제품의 원산지 및 위치 공개 지시
인공지능 (1.29)	S.321 (상) (1.29)	Josh Hawley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PRC) 내 미국인의 인공지능 역량 개발을 금지하기 위해 제18편 미국법전 개정

* 미국 동부 시간 1월 30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No Survivors Expected in Jet-Helicopter Crash Near D.C. (여객기·헬기 충돌...생존자 발견 가능성 희박)</p>
	<p>수요일 밤에 발생한 여객기·헬기 충돌 사고 관련,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돼.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으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꼽았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p>
The Washington Post	<p>Trump baselessly criticizes DEI in D.C. plane crash: 67 feared dead (트럼프 대통령, “DEI가 사고의 원인이야”)</p>
	<p>트럼프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이 연방항공국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또 바이든 및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항공국의 채용 기준을 낮췄다고 비난</p>
The New York Times	<p>Congress approved more flights at Reagan despite warnings of danger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공편 추가 승인한 美 의회)</p>
	<p>레이건 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허브 공항임에도 지난 5월 의회는 5개의 장거리 노선을 추가하는 안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켜. 표결 당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주 상원의원들은 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해</p>
CNN	<p>At time of crash, one controller was working two tower positions, source says (관제 인력배치가 문제?)</p>
	<p>사고 당시 한 명의 관제사가 두 개의 관제탑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사고 시간과 교통량을 고려해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석</p>
USA Today	<p>Donald Trump's interest in buying Greenland 'not a joke', Marco Rubio says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은 농담이 아니야”)</p>
	<p>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관심은 농담이 아니며 단순히 땅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해</p>

* 미국 동부 시간 1월 30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6	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4.12월
US24-45	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고대역폭메모리 수출통제 조치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4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전망	2024.12월
US24-43	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	2024.12월
US24-42	미·중 경제안보 심의위원회 연례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1	118대 미국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법안 전망	2024.11월
US24-40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관세 추진 동향 및 주요국 대응 전략	2024.11월
US24-39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소매업계 영향 전망	2024.11월
US24-38	미국 반도체법 첨단 패키징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 동향	2024.10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20 (2024.12.23.)		
코인시-19 (2024.12.23.)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jwshim@kotra.or.kr	